“우리가 백남기다” 눈물의 외침 속 애도

백남기 농민 망월묘역 영면

전국서 온 농민·시민 추모
유족들 “이제야 고향 돌아와”
금남로 노제 3000여명 운집
보성서도 추모문화제 열려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 마지막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망월묘역(5·18구 묘역)에 들어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장례 행렬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비통함이 가득했다. 운구차를 뒤따르던 유족들은 애써 눈물을 참았다. 뒤이어 들어선 대형 그림 영정(세로 3m, 가로 2m) 속 백남기 농민은 얼굴 가득 미소 짓고 있었다.

하관식은 이영선 신부(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의 주례로 천주교식으로 진행됐다.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농민, 노동자, 시민들이 백남기 농민이 안장되는 망월묘역 민족민주열사묘역을 가득 메웠다. 묘역 주변에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하관식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고인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평생 벗 삼아 살아온 땅속에 안장되자 눈시울을 붉혔고, 추모객들도 고인의 마지막 모습에 흐느꼈다.

백씨가 안장된 망월묘역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최초 안장된 곳으로, 5·18사적 제24호로 지정돼 있다. 고인의 바로 옆 자리에는 지난해 8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사망한 최현열 선생이 자리하고 있고, 주변에는 1987년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지며 6월 항쟁의 불씨를 지핀 이한열 열사,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 열사, 5월 영령 등이 안장돼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께 동구 금남로에서는 이낙연 전남지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천정배 의원, 표창원 의원, 김경진 의원, 송기석 의원 등 정치인과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노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우리가 백남기다. 민중세상 건설하자. 통일세상 건설하자’ 등 구호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기도 했다.

문경식 고 백남기농민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고인의 고귀한 삶이, 고인의 억센 신념과 투쟁이, 저희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또 다른 백남기로 일으켜 세워 지금의 위대한 항쟁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며 “반드시 민주주의와 정의, 민생과 평화가 숨 쉬는 통일 세상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백남기 농민의 막내딸 민주화씨는 “아버지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을 잃은 뒤 저희는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했다”며 “가족 곁에서 함께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그 시간을 이겨냈고 부검이라는 끔찍한 현실에서 아버지를 구해 결국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게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고인의 고향인 보성에서는 고인의 운구 맞이와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이날 밤 10시께 고인이 1년 만에 보성에 다다르자 지역 농민 등 500여명의 도민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백남기 농민을 맞이했다. 빈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작으로 밤 늦게까지 추모 문화제가 이어졌고, 많은 추모객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앞서 보성역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도 20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참석했다.

백남기 농민과 30년 지기인 최영추(65)씨는 “지난해 형님에게 함께 서울로 올라가자고 권유한 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힘들었다”며 “이제는 슬픔이 아닌 고인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우리 농촌을 살리고 발전시킬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월25일 눈을 감았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시신 부검 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학생과 노동자, 농민 등 지역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백남기 농민의 노제가 열렸다. 영정을 앞세운 운구 행렬이 장지인 광주 망월동 망월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지로 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폭력조직 거느리며 폭행·협박 일삼아
광양시체육회 부회장 구속

광양시체육회 부회장이 조직폭력단을 거느리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광양경찰은 조직폭력배를 이끌며 부하 조직원을 동원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양시체육회 부회장인 최모(52)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가 조직원 40여명으로 꾸려진 일명 광양 로터리파의 실질적 두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양 공설운동장과 광양 시내의 한 호텔 등에서 과거 자신의 조직에 몸담았던 후배 2명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폭력조직원을 대동했으며, 흉기와 야구 방방이 등을 들어 위협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가 폭력과 협박을 저지른 이유는 과거 자신의 조직에 몸담았던 후배들이 평소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조직일을 잘 챙기라는 지시에도 순순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2014년 광양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에 선출된 뒤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해당 조직의 실질적 두목이 된 이후 잠시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줬으나 줄곧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자신이 범죄단체의 두목이라는 의혹, 조직원을 대동하고서 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갑질 횡포’ 순천 지역 기자 4명 구속

업체·공무원 협박 금품 뜯어

건설사와 공무원 등에 ‘갑질 횡포’를 부린 순천지역 기자 4명이 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대표와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방일간지 순천주재기자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53)씨는 지난 3월께 순천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운영자를 협박해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순천에 건립한 한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를 찾아가 홍보성 기사 작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118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B(58)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개월 동안 같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운영자를 수차례 협박해 5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순천시언론인협회 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규정에 위반된 부분을 약점으로 잡고 서로 정보를 공유한 뒤 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C(50)씨는 순천시가 2012년 1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심으려고 추진한 서면 구상리 도유림의 조경수 반출을 막겠다며 주민들을 동원, 공무원을 협박한 뒤 자신의 처남을 조경작업자 명단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게 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147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박씨와 같은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를 상대로 홍보성 기사 작성을 대가로 5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D(54)씨는 지난 6월께 순천의 한 건설현장의 유치권을 포기하도록 협박하다가 유치권자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남기 농민 내년 5·18묘지 이장될 수도

유공자 인정되면 가능

6일 광주시 북구 망월묘역(5·18구묘역)에 안장된 백남기 농민의 유골은 이르면 내년 초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의 신청을 받아 광주시가 백 농민을 포함해 500여명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년 중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백 농민의 가족은 올해 1월 광주시를 찾아 고인이 참여한 민주화운동 및 반독재 투쟁을 다룬 언론보도, 판결문 등을 전달하고 5·18 관련 유공자 신청을 했다. 백 농민의 한 후배는 당시 유족들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5·18 보상에 관해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던 백 농민의 뜻을 거스르고 가족들이 5·18 관련 유공자 신청을 한 이유는 고인을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백남기 농민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진행 중인 5·18 관련 유공자 심사 결과에 따라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구묘역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할지 여부는 결국 유족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백 농민은 중앙대 총학생회 부회장이던 지난 1980년 5월8일 당시 박정희 유신 잔당(전두환·노태우) 장례식을 주도했고, 같은 해 5월15일에는 중앙대 학생회가 주도한 ‘중앙 4000인 한강도하’를 이끌며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이어 5월 17일에는 군부 계엄확대 조치로 계엄군에 체포돼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3·1절 특사로 풀려나기 전까지 6개월여 수형생활을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광주시 산하)에서 백 농민을 5·18 관련자(연행·구금·수형)로 인정할 경우,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5·18 관련자 증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심사만 치르면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부, 시국선언 교사들 징계 검토 논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무원들의 집회·시국선언 참여에 대해 ‘징계 으름장’을 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광주시 등에 보내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는 5일과 12일 공무원들의 집회 참가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집단행위·복종·품위유지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지난 3일 각 시·도교육청에 “규정과 법령에 따라 복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이 공문을 곧바로 각급 학교 등에 내려보냈다.

특히,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4일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교사 2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과수 “3명 사망 中 어선 화재 원인 섬광탄 가능성”

홍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불이 나 선원 3명이 숨진 중국 어선의 화재 원인은 우리 해경이 던진 섬광 폭음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왔다. 숨진 중국인 선원 3명의 사망 원인은 당시 선박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6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9월 29일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불이 난 중국어선 소감어04012호의 화재 원인과 숨진 선원 3명에 대한 사인 등에 대한 감식결과를 지난 4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해경이 던진 섬광 폭음탄의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숨진 중국인 선원 3명은 당시 선박 화재로 일어난 연기에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화재와 선원 사망 등의 불상사는 선장이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과수가 통보한 화재 원인의 경우, 해경이 단속 과정에서 던진 섬광탄이 화재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명확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선거법 위반’ 이윤석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2015년과 2016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도 포함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반지가 안빠져요” 초등생이 119구조 요청…5분만에 제거

쌍나팔

○…광주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손가락에 끼운 반지가 빠지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해와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6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1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모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최모(12)양의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가 빠지지 않아 119가 출동, 절단기를 이용해 5분여 만에 무사히 제거했다는 것.

○…소방서 관계자는 “최양이 쉬는 시간 친구 반지를 잠시 빌려 끼워보다가 빠지지 않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에 꽉 낀 반지는 비누거품, 식용유 등을 손에 바르면 생각보다 쉽게 뺄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도 반지가 빠지지 않을 경우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13152	1	북구 천변우로11, 104동 1층 101호 [임동, 주공아파트] 51.94㎡	아파트	124,000,000 124,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9535	1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519-4 159㎡	대	64,159,800 64,159,8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519-7 278㎡	대		
		동소 519-4 94.45㎡제시외 가축등 109.7㎡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6타경9771	1	남구 월산동 155-55 화이트빌라 4층 401호 46.425㎡	다세대	49,000,000 49,000,000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10009	1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517-3 340㎡[농지취득자격증명요[군남면사실조회회신서의함]	대	2,278,000 2,278,000	
2016타경62598	1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283-2 536㎡	전	49,619,000 49,619,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이상소유자나성식
		동소 287-2 350㎡	답		
		동소 288 248㎡	답		
		동소 289 453㎡	전		
		동소 856-71 508㎡	답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자동차,중기]					
2016타경62284	1	사용본거지:서구 금호동 동천동 하남대로710번길 20, 503동 105호[우미린아파트] 등록번호:49조1570 차명:쏘나타 연식:2011	자동차	12,000,000 12,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기타]					
2016타경8754	1	광산구 옥동 1236-1 2911.9㎡ 제시외 기계기구목록참조	공장용지	3,297,097,000 3,297,097,000	일괄매각.공장저당법제6조기계기구목록참조
		광산구 평동산단로 217 1380㎡ 부속건물 사무실361.9㎡ 제시외 창고 69.3㎡[물건번호1:[제시외건물,기계기구포함]단,제시외타인소유기계기구[코일뽑는기계등]28점제외[감정서및2016.10.4.재현황조사서참조]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11. 22.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11. 29.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신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형남곤